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의정단상



정다은
광주시의원

2016년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졌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을 들고 매주 추운 광장을 지켰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아래 진행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의 참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국민의 염원을 확인한 정치권은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동의해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후에도 지속된 상난 촛불의 파도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같은 기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김정남 피살사건과 같은 세계사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의 영향력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11월. 우리 국민은 또다시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다시 광장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문제,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천군 논란, 바이든 날리던 사건, 강제징용 제3차 변제안 수용 등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논란과 의혹이 터져 나온 데에 더해 이제는 '명태군 스캔들'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한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검사 등 14명에 이르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무려 15회에 이른다.

쉬지 않고 터진 거대한 이슈와 문제 스캔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여당의 반응은 '그게 왜 문제냐?' 라는 식이다. 어떤 수사라도 형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흡사 재난 영화 속에서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느낄 법한 심정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불과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거나 파면

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국민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권력을 빌려주는 것일 뿐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은 언제든 빌려준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관련해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해 정치협오와 무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이후 파면 여부는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나 이는 오롯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된 목소리로 의견을 표명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행스럽게도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별로 표현의 정도와 내용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매일 곳곳에서 들려온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낼 차례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버틴 지난 시간보다 더 힘든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 있을 선명한 응답을 기대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社說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그렇게 어렵나

불통으로 민심 되돌릴 수 없어

전남대 교수들이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7일에도 전국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 채 7일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불통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안 하느니라 못했다'는 후평도 나온다. 진솔한 사과와 국정쇄신에 대한 의지로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낚버린 윤 대통령의 인식이 안타깝다.

이날 전남대 교수 107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책임 현실을 목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 하루 버티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

며, 대일 굴종 외교로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렸다는 것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빠져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분명치 않은 국정 철학으로 국민을 분열시켰다. 편협한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로 국가를 혼돈에 빠뜨리기도 했다. 나라 빛이 늘어나고 민생이 피폐해지면서 미래마저 불투명하다. 꼬리를 무는 건전희 역사 관련 논란에 정치 브로커 명태군 씨의 통화까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설령 국정 개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가 그런 인사와 저급한 대화를 나눴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국정 지지도마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7일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다. 윤 대통령이 되돌아선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국정을 상식에 맞춰 쇠신하는 것 뿐이다. 가족과 측근의 비리 의혹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외교에서 자존심도 되찾아야 한다. 10일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날이다. 남은 임기도 이렇게 보낼 순 없다.

광주시 '모빌리티·AI'로 새로운 도약을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정부가 광주 빛그린국가산단과 첨단3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 68만 6797㎡(20만7000평)와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52만 3560㎡(15만 8000평)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분야 특구로, 첨단3지구를 AI분야 특구로 각각 키운다. 특히 앵커기업인 ㈜DHO 토웨어 등 기업들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모빌리티특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자부품 및 2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AI특구는 인공지능 기술상용화를 위한 핵심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한다. 광주시는 이날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앵커기업인 ㈜DHO 토웨어 등과 '기회발전특구 투자협

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특구 내 투자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특구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광주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광주를 살리는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게 목표다. AI와 모빌리티 산업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수도권 집중화라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단숨에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선점할 좋은 기회라는 의미도 크다. 남은 과제는 실행이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발전 특구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광주시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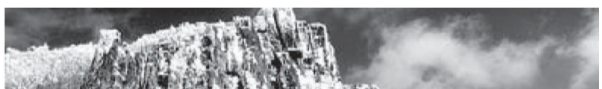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6일(현지시각)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모뉴먼트 벨리 파크에서 친구 사이인 엘리자베스 라슨과 헨리 존스가 눈썰매를 타고 있다. 이 지역에 몰아친 눈폭풍으로 콜로라도스프링스 곳곳에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AP/뉴스시

서석대

장(醬)은 우리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료다. 짠맛과 단맛, 감칠맛 등이 어우러져 무침부터 찜, 국까지 꼭 필요한 조미료이기도 하다. 농업이 주업이던 시절 우리네 어머니는 콩을 주재료로, 보리쌀과 멥쌀, 찰쌀과 소금 등을 넣어 고추장과 된장, 간장을 만들었고 이 장은 1년 내내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장을 담그는 일도 김장 못지않게 중요한 연중 행사였다. 재료 준비부터 메주를 만들어 띄우고 달일 때까지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장 맛으로 그 집안의 기풍과 살림살이, 안주인의 음식 솜씨 등을 가늠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장과 관련된 속담도 많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일삼는 사람에게는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고 나무랐다. '장 단 집에는 가도 말 단 집에는 가지 마라'는 말도 있다. 실속 없이 말로만 친절한 체하는 이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경고다. 무엇인가를 장담할 때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고,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고 했다. 겉모양은 보잘 것 없는데 속 내용이 좋은 것에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칭찬했고 못난 사람이 미운 짓을 일삼을 때는 '의젯잖은 며느리 사흘만에 고추장 세 바랭이 먹는다'고 힐난했다.



장은 가문과 집안의 전통을 지키는 문화로도 중요했다. 장흥고씨 양친재파 10대 종부 기순도 씨가 담양에서 만드는 '진장(陳醬)'은 3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지금도 기씨는 '한식의 진정한 맛은 장 맛에 좌우된다'고 한다. 나주 밀양박씨 종가인 남파고택에서 만든 간장도 200년 종가의 자존심이 녹아있다. 500ml 한 병에 1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얼마 전에는 충북 보은 보성선씨 종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씨 간장이 1L에 500만 원에 팔려 화제를 모았다. 변변치 않다고 생각했던 장의 가치가 그

야말로 '사또 밥상에 간장 종지' 격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가 최근 '한국의 장 담그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래 10년만의 결실이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초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지금까지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어 등재는 확실한 것 같다. 우리의 장 문화는 수십대 내려온 한 집안의 혼과 손길이 스민 역사 이면서 예술이다. 강강술래부터 아리랑과 김장 등에 이어 장 담그기 까지. 우리 조상들이 척박한 환경과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 하고 전승시켜 온 우리들의 문화가 자랑스럽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